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남상욱

1. 들어가기: 김대중의 말로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의 의의 다시 묻기

2023년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한·일 공동선언’을 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 양국 미디어 모두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한국 미디어에서도 많이 인용 보도된 기사가 『아사히신문』이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 교수와 나눈 인터뷰이다. 거기서 오코노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상욱(南相旭) 국립인천대학교 일본지역문화학과 부교수. 주전공은 비교문학비교문화로 전후 일본 및 한국의 미국화 양상을 문학 및 영화 등의 미국 표상을 통해 연구하는 한편, 현대 일본과 한국의 문화 변동 양상을 재난, 지역소멸, 학력격차 등의 현대적 이슈 속에서 규명하려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코쿠’에서 일본을 읽다』(yeondoo, 2023), 『포스트·포스트콜로니얼리즘』(역락, 공저, 2023), 역서로는 사다카네 히데유키의 『현대 일본의 소비 사회』(yeondoo, 2023) 등이 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4.30.266>

Q : 선언의 의의는 무엇이이었을까요?

A :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사죄하고 한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여,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맹세했다는 데에 최대의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되돌릴 원점으로서 늘 의식되어 왔습니다.

Q : 선언 후, 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일 시민교류는 확대되었습니다. 정치가 주도한 드문 예입니다.

A : 바로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한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이 오늘날 융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일 공동선언의 최대 의의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¹

오코노기의 지적대로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자주 언급되어 왔던 것이 바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었고, 현재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도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선언의 빈번한 소환은, 되돌아가야 할 그 ‘원점’에 있는 “일본 측이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사죄하고 한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여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맹세한다”는 원칙이 지난 25년간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오코노기는 한일 공동선언의 최대 의의는 그 원칙이 아니라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쪽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25주년을 맞이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의는 무엇일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의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언급과 연구가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그 의의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한일 민간 교류의 본격화와 한국 문화산업 발전의 계기다.² 전자와 관련해 한영균은 개

1 「日韓共同宣言から25年、外交にどう影響？小此木名譽教授に聞く」, 『朝日新聞』 디지털, 2023. 10. 7., <https://www.asahi.com/articles/ASRB673B5RB4UHB101D.html> (검색일: 2023. 11. 30.).

2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강태웅, 「거부에서 수용으로: 90년대 대중적 일본문화론의 특성과 변화」, 『일본비평』 3, 2010; 남상욱, 「일본 대중문화와 한국의 통치성: 자기 제한 장치에서 플랫폼 속의 소비재로, 나아가 규제 회피의 회랑으로」, 『상허학보』 제54집, 2018; 오현성, 「문화제국주의론에서 바라본 타자로서의 일본 :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

방을 통한 일본 대중문화 유입 경로 양성화가 일본 측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얻게 됨으로써 “일본 내 한국문화 소개 사례가 증가하고 양국 간의 공동 제작 영화나 드라마 등이 방영”되고 이러한 흐름이 “한류 붐으로 이어져 양국 간의 문화수용이 상호교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³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는 이러한 문화적 상호교류에 주목하여 한일 교류의 양상이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하기에 이른다.⁴ 후자와 관련해 김성민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문화산업을 성장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문화정치’라는 문제가 ‘문화경제’로 전환되어 간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이는 국가적 행사로서 치러진 2002년 월드컵 이후 “문화의 교류가 어떻게 정치와 경제에 동원되지 않으면서 한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한다.⁵ 이러한 김성민의 지적은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의 동원이 바람직한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지만, 그 이전에 ‘과연 문화가 정치 및 경제와 분리되어서 이야기될 수 있겠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낳는다. 즉,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한국의 정치, 경제와 어떻게 결부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이라는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의 문화 및 일본 대중문화 개방 관련 담화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춰 그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24년에 태어나 1998년 제 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날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도 독자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재는 “한반도의 통일·평화 문제에 관해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평생 실천한 인물”이자 “동시대에서 가장 국제화된 감각과 세계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치인”

118집, 2019, 장인성,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자기 해방”: 일본 대중문화 담론의 성격과 개방의 방향」, 『국제문제연구』 22권 1호, 1998; 한영균,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현황 및 의의」, 『일본문화연구』 제86집, 2023, 홍성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문화정치」, 『문학과학』 제41집, 2005 등이 있다.

3 한영균,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현황 및 의의」, 『일본문화연구』 제86집, 2023, 286쪽.

4 木宮正史, 『日韓關係』, 岩波書店, 2021, 139쪽.

5 김성민, 『일본을 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4, 199~201쪽.

으로,⁶ 류동민은 “세력균형’과 ‘참여’를 두 가지 축으로 삼는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축으로 하는 경제사상을 지녔던 대통령으로,⁷ 노명환은 “보편적 세계주의”라는 이념을 지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실현과 문화산업”의 기초를 마련한 사상가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⁸ 이러한 김대중의 사상은 단순히 이념적인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의 접촉을 통해서 수정되면서 만들어졌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고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김대중의 사상에 있어 일본과의 관계는 빼놓을 수 없다. 와다 하루키에 따르면 1973년 일본에서 일어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당시 일본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일본사회가 김대중 구명 운동을 비롯해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⁹ 현대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의 중요성은, 류상영이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의 존재와 그의 경험은 당시의 시대적 산물임과 동시에, 자신이 만들어낸 적극적인 정치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며, 그의 정치 행위는 당시의 시대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¹⁰ 특히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한·일 공동선언’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김대중의 중요한 업적인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상가로서 김대중의 말보다는, 근대 국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의 말이라는 측면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대통령의 말을 개인의 사상의 직접적인 투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

6 김학재,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집 2호, 2017, 60쪽.

7 류동민,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호, 2010, 166~169쪽.

8 노명환, 「한류를 위한 김대중의 기여와 미완의 김대중 사상 정책의 완성을 위한 한류의 의미와 역할: 민주주의 평화 상생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세계시민주의를 위하여」, 『역사문화연구』 제83집, 2022, 226~227쪽.

9 류상영 외 편,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205~238쪽.

10 류상영 외 편,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50쪽.

는 국가 통치 이념에 대한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김대중의 말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의 통치성을 대리=표상하는 대통령의 말 속에서 일본 대중문화와 그 개방은 어떻게 표상되었고, 이는 한국 국민의 행동 양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한 것일까. 그리고 김대중을 통해 발화되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마지막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지연은 어떠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을까.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이하 본문에서는 먼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이르기까지의 1990년대 한국의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김대중의 문화 인식의 변화를 통해 한국 통치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통치성의 변화가 일본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재현되며,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오해를 낳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일본 대중문화 완전 개방이 이르지 못한 데에 대한 상황을 되짚어 보며 김대중의 말로 대표되는 한국 통치성의 또 다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이 글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의를, 한국 통치성 속의 ‘문화’ 개념의 재배치와의 관련성 속에서 찾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와 김대중의 ‘문화’ 인식의 전환 :

소비되는 ‘문화’에서 산업화되는 ‘문화’로

대통령 김대중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표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직 대통령이 되기 이전인 1990년대 김대중의 세계 인식과 그 속에서 문화가 어떤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992년 대선 패배 이후 김대중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 교수로 지내면서 냉전 이후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예컨대 1993년 3월 31일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와의 대답에서 김대중은 “현재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나 유럽 또는 미국을 볼 때 경제

적 이슈들에 집중하면서 경제 블록을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언급한 후, “선진국들이 그렇게 할 때 한국처럼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는 한편,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유럽처럼 동아시아, 미국, 중동, 아프리카도 일종의 느슨한 지역적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이것들이 언젠가는 아마도 세계 연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기든스에게 반문한다.¹¹ 이러한 김대중의 문제의식은 5월 15일 바츨라프 하벨 체코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 때는 어느 한쪽에 가담하거나 제3세계에 속하면 입장이 쉬웠음. 냉전 종식 이후 대국들의 에고이즘(egoism, 자기중심주의)이 등장하는 듯함. 냉전 시대에는 서로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썼으나 이제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상대도 안 해 준다는 인상임. EC(European Community) 국가들은 과거 동구 공산권 나라들에 대해서 공산주의만 포기하면 도와도 주고 시장도 개방해 준다고 했는데 냉전 이후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¹²

김대중에게 탈냉전은, 냉전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방 세계의 동력(지원)이 그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대로 인식된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 기업 단위의 글로벌 자본주의가 국가의 틀을 넘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이전인 1993년에 김대중은 이미 국가 간 무한 경쟁 시대의 돌입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93년 5월 24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보여 준 세계 체제 변화에 대한 진단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르면, 냉전 종식으로 이데올로기 대결이 종식되고 세계적 규모의 경제전쟁 시대로 돌입하면서, 노동력에 기반한 공업생산 중심에서 지식 중심의 정보 지식산업, 생명공학, 첨단기술산업 중심의 시대로의 전환하고,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서구 선진

11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6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35~36쪽.

12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6권』, 55쪽.

국 중심의 대서양 시대에서 중진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그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먼저 이 지역 내의 안보협력 체제의 마련에 성공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경제적 공동협력체제의 구성에 성공한다면 틀림없이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¹³ 요컨대 탈냉전 이후 세계적인 경제 체제의 변동에서 서구(선진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아시아에 지역 안전보장을 기본 전제로 한 경제 공동체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대중의 세계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김대중은 1994년 1월 1일 아시아태평양재단을 출범시키게 되는데, 재단 창립 기념 연설에서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아시아 민주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자간 안보 문제, 경제적 협력문제 그리고 문화 교류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⁴

북한의 NPT 탈퇴와 김일성 사망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던 1994년 상황에서 김대중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적 단계적 통일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도 주변국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함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문화 교류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요청될 뿐이다. 그 이유는 일부 국가들에서 ‘문화’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목으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1994년 12월 15일 간행된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문화란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라는 글에서 김대중은, “외국의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의 말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아시아의 문화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반

1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6권』, 172~174쪽.

1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7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112쪽.

문하며, 아시아의 민주주의적 전통을 풍부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한다. 사실 리관유처럼 탈냉전 이후 서구의 비서구권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문화제국주의로서 비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데, 김대중은 아시아에서 시급한 것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일이며, 여기서 가장 큰 장애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변명자들의 저항”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¹⁵

그런데 1997년 5월 19일 15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대중은 “21세기란 군사력 대신 문화가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시되는 세기다.”라고 주장하여, 문화를 외교력과 경제력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킨다.¹⁶ 그리고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후인 1997년 7월 4일 한국발전연구원에서 김대중은 “앞으로 7년이 지나면 경제적 국경이 없어지고 무한경쟁 아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 가서든 사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단언하는 한편, “WTO 체제 시대는 무력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이 안전 경쟁·자유 경쟁·자유 활동의 시대로, 경제와 문화가 국력이 된다.”라고 주장한다.¹⁷ 이른바 정부의 기능이 축소되는 대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중심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함과 동시에, 그 체제하에서는 경제와 더불어 문화가 새로운 가치로서 부상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은 스피버그 감독의 <쥬라기 공원>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7권』, 653~660쪽.

16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란 인류 역사상 최대 변혁의 세기이다. 지난 300년 동안 계속된 노동력에 의한 산업혁명의 세기로부터 이제 우리는 두뇌에 의한 지식 문명의 세기로 들어 서고 있는 것이다. / 둘째, 21세기란 오랜 대서양 시대에 종막을 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 셋째, 21세기란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기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의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국가의 시대가 크게 후퇴하는 세기이다. / 넷째, 21세기란 군사력 대신 문화가 경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시되는 세기이다. / 다섯째, 21세기란 민주주의가 동서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세기이다. / 여섯째, 21세기란 전 세계가 시장경제체제인 WTO 속에 하나로 연결되는 세기이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9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254~259쪽.

1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9권』, 299쪽.

경제도 대기업주의에서 중소기업주의와 벤처기업주의로 가고 있으며,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기여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문화 산업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영상매체 산업 등 문화산업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컨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한편으로 8억 5000만 불의 실이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돈으로, 이만큼 수출을 하려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영화 한편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문화의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¹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선 후보 김대중은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일종의 교양으로서 기능하는 데 멈추지 말고,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써 <쥬라기 공원>의 순수익의 규모를 자동차 수출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유는 전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3년에 <쥬라기 공원>의 히트에 큰 충격을 받은 김영삼은 1995년 11월 21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접견해, 한국영화 발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기술지원과 경험 전수를 부탁했다고 했을 정도다.¹⁹ 사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영상산업을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명시했고, 1995년 3월 통산산업부는 영상산업에 대해 제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영화업에 금융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김대중의 인식은 사실 김영삼 정부의 문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9권』, 299쪽.

19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일정일지기록 김영삼」, <https://www.pa.go.kr/portal/contents/stroll/schedule/scheduleIndex.do?year=1995&month=11&searchDate=1995-11-09> (최종 검색일: 2024. 1. 5.).

그렇다면 왜 두 대통령 모두 세계화에 있어 문화의 산업적 측면을 이토록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1980년대에 1990년대에 걸쳐 한국의 문화 소비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 확대된 국내 문화 소비 시장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다는 사실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영화의 경우 냉전 종식 이전부터 미국 영화는 국내 영화에 비해 그 질과 양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시장의 논리에 맡겨 놓는다면 국내 영화 산업이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에서 국산 영화 방영 일수를 법제화한 스크린쿼터제가 1966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 의한 영화시장 개방 압력으로, 외화수입 자유화와 외국영화사의 국내 직배가 가능해진다. 1988년부터는 UIP에 의한 직배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 영화의 주요 소비시장이 되었음을 추인하는 사건이었다. 요컨대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강조 이면에는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의 소비와 생산의 불균형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김대중 정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양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국내적으로 이 시기는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 사회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남은영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쳐 1980년대에 이후에 이른바 ‘대중소비’의 시대로 진입했고, 1990년대에는 거의 전 영역에서 양적 소비로부터 질적 소비로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한다.²⁰ 이에 대해 훗날 강준만이 “90년대는 ‘소비의 시대’였다. 절제없는 소비였다. 허세가 난무했다. 그건 지도층까지 지배한 시대정신”이었다고 비판한 것은 유명한데, 이 역시 ‘소비’라는 행위가 사회 구석구석에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었다.²¹

20 남은영, 「1990년대 한국 소비 문화: 소비의식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76집, 2007, 192쪽.

21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1권』, 인물과사상사, 2006.

1990년대에는 물질적 소비만이 아니라 광고 등이 발신하는 기호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가 출현했다. 이른바 X세대로 불리는 그들은 10대 시절인 1980년대부터 이미 패션 소비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면서 자기 세대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는데, 2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인 문화 소비를 시작한다. 그들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음악이나 영화 소비를 통해 전 세대나 집단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비는 강준만이 말한 ‘허세’(베블렌의 ‘과시적’)적인 차원을 넘어, 장 보드리야르가 말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체계로서, 끊임없이 보내고 받아들이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활동”으로 변모해 갔음을 보여 준다.²²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 행위는 단순히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함을 뜻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유복하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게임의 규칙에 참가시킴으로써”, “모든 이데올로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들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도, 혹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했기 때문도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

소비 사회로 진입한 한국인들에게 세계화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게임을 반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원천 소스의 확대였다. 당시 대다수 한국인에게 열린 세계라는 외부는 관광이나 유학 등의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같은 문화 소비를 통해서 경험되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슈라기 공원>을 통해 빠져나가는 돈의 양을 계산할 때, 젊은이들은 CG 기술을 통해 공룡을 보는 문화적 경험을 사서 커뮤니케이션의 문맥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외국 문화 소비가 거듭될수록 자국 문화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앞서 살펴봤듯이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11쪽.

22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15, 138쪽.

있었다. 중국 시장에서 조금씩 그 성과가 보이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문화산업을 둘러싼 수출입의 불균형이 곧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문화를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요청될 필요가 있었다. 즉, 개인의 소비 선택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로부터 소비를 생산의 차원으로 되돌리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다. 예컨대 이 시기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함에 있어 참조가 되는 것은 1970년 말 미셸 푸코가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다음과 같은 특성일 것이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게임이라는 것, 경제는 참가자들 간의 게임으로서 전개된다는 것, 사회 전체는 이 경제 게임에 의해 관통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는 이 경제 게임의 규칙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본질적인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²³

이러한 푸코의 인식은 앞서 봤던 소비 사회가 화폐로 교환한 상품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게임이라는 보드리야르의 인식과 일견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푸코는 두 가지 점에서 보드리야르와 다르다. 먼저 그는 보드리야르와는 달리 이러한 사회 전체의 경제 게임화에 국가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푸코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게임의 규칙들을 규정하고”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위 인용에 이어서 그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규칙으로 “그 누구도 애초부터 이 경제 게임에 참여하고자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원하지는 않은 채 참가하게 되는 이 게임에서 아무도 배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는 사회의 구성원에게 경제성에 입각해서 인지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살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푸코는 현대 사회가 생산

23 미셸 푸코, 오토르망 율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난장, 2012, 291쪽.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보드리야르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생산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상세히 분석한 후 푸코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노동과 임금, 임금과 상품을 교환하는 인간에서, “자기 자신의 자본,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생산자,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소득의 원천으로서”의 존재로서 변했다고 지적한다.²⁴ 즉, 미국발 신자유주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소비라는 행위조차도 ‘자기’ 투자로서 전환하는 일종의 ‘기업’처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푸코는 놓치고 있지 않다. 이제 국가는 개인에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투자하도록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앞서 인용한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로 돌아가 보자. 먼저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문화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문화예술인도 일종의 ‘기업’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쥬라기 공원>의 감독 스피버그를 거론한다. 스피버그는 관객들을 기존에 없었던 감각적 쾌락을 제공해 주는 창의적 아티스트가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일종의 대기업에 필적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롤모델로서 표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은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시장의 안으로 들어와 ‘게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둘째로 그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화폐 가치(교환 가치)로서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분명 푸코가 말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는 단순히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시장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혹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해 왔던 거의 마지막 보루였던 문화인마저 시장 질서 안으로 포섭시키기 위해 유도함으로써 1980년대에 정치의 장에 근접했던 문화를 경제의 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정치적 투사였던 문화예술인은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가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1997년 당시 한국은 문화에 대한 이러한 김대중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아시아 지역에 외환 유동성

24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319~320쪽.

위기가 찾아왔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여 과잉투자를 했던 국내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마침내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자동차나 철강 회사도 경쟁력이 떨어져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한국의 문화예술인이 김대중의 말처럼 “조그마한 영화 한 편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문화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당시로서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1997년 12월 이른바 IMF 외환 위기하에 치러진 대선에서 마침내 당선된 이후 김대중은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당선인으로서 갖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대중은 “21세기는 경제와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가 국력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배제하여 문화 선진국을 향한 토양을 만들고, 문화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²⁵ 정부의 문화 정책의 원칙을 표명한 후 문화를 산업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 정책을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한 이 대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김대중에게 ‘문화’와 ‘경제’가 쌍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엄중한 IMF 관리 체계하에 치러진 대선에서 김대중이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으로 표상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문화가 시장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문화는 이미 그 자체로 경제의 범주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조지프 히스와 앤드류 포터는 1994년에 일어난 너바나(Nirvana)의 리드싱어였던 커트 코베인의 자살에 주목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에 반발하는 어떠한 반문화(counterculture)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유통되어 불티나게 팔려 나가게 되는 데에 절망한 사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²⁶ 요컨대 신자유주의가 세

2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 제1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4쪽.

26 조지프 히스·앤드류 포터, 윤미경 옮김, 『혁명을 팝니다』, 마티, 2006, 21~25쪽.

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1990년대에 이르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불온한 형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포섭함으로써 체제 전복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버리고 만다.

만약 이것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배제한다’라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에 걸맞은 문화 정책의 원칙 표명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가 이미 하나의 경제라면, 국가는 더 이상 문화의 내용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어떠한 ‘불온한’ 내용을 가진 문화도 결국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된다면 경제성(교환 가치)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의 내용에 대한 가치평가가 시장경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가는 문화의 내용에 간섭하기보다 그것을 상품이라는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문화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에 주력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김대중의 인식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컨대 대통령 취임 이후 1998년 4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의 질의응답에서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대통령께서는 여러 기회에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이야말로 국가의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문화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문화산업의 진흥에 대한 기본 신념이나 철학을 묻는다. 이에 김대중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세계에 심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인다.²⁷ 이렇게 문화의 경제성을 거듭 강조하는 김대중의 말로부터, 역설적으로 이 시기까지 한국에서 문화가 여전히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인식

2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195~198쪽.

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은 중요한 계기가 된다.

3.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교류: ‘문화’ 보호를 둘러싼 인식 차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1998년 1월 2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국 관계를 보면 일본은 전전이 끝나지 않았고 한국은 전후가 시작되지 않았 습니다. 전후 청산은 독일이 먼저 했는데 피해국 입장에서는 개운치 않는 부분 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일본에 대해 아직 남아 있는 것 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는 평화헌법이 있고 비핵 3원칙이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 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문화 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화 쇄국주의만큼 자국에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재창조가 필요합니다.²⁸

납치 사건으로 인해 이미 일본에서 잘 알려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수차례 일본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과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통일 및 안보, 경제 부분에서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그런 김대중이 일본 문화 개방 반대 가 옳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단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물론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1994년 2월 24일 문화체육부는 1단계로 국제가요제와 문화행사 등에서 일

28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37쪽.

본어 가창, 일본 배우의 국산 영화 출연, 한-일 합작 영화 제작 등을 허용하고, 2단계로 일본어 대중가요 가창 및 음반 수입, 일본과 제3국 간 합작 영화 수입을 허용하며, 3단계로 극영화 수입을 허용한다는, 단계적 개방 방안을 밝히며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는데,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²⁹ 연구자들 사이에는 그 요인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 IMF 경제 위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³⁰ 그렇다면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경제주권이 빼앗긴 IMF 관리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즉 위에서 김대중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반대가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때가 시장 개방과 사회 구석구석에 경쟁 체제의 확립을 요청하는 IMF 관리 체제였다는 사실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사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추진은 반대 여론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반대의 이유로서 주로 제기된 것은 문화적인 종속, 저질시비론, 국내산업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³¹ 이것들은 각기 다른 문화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데, 문화적 종속은 문화를 민족적 정체성으로, 저질시비론은 그것을 일종의 교양 체계로, 국내 산업보호는 문화를 일종의 산업으로 본다. 1990년대는 이렇게 ‘문화’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식들은 일본 대중문화를 일본문화(민족정체성), 저질문화(하위문화), 위협적인 산업(비교우위의 산업)들로 인식시켜, 개방을 지연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반발은 시장 개방에 대해 반발하는 중요한 기제로 여전히 ‘문화’ 개념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지연은, 문화라는 개념이 1990년대 내내 전방위에 걸쳐 진행되었던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마지막

29 「일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 정부 방침 일본배우 국산영화 출연등 우선 허용」, 『한겨레신문』, 1994년 2월 25일, 1면.

30 한영균,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현황 및 의의」, 『일본문화연구』 제86집, 2023, 271쪽.

31 장인성,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자기 해방”: 일본 대중문화 담론의 성격과 개방의 방향」, 『국제문제연구』 22권 1호, 1998, 68~69쪽.

저항선으로도 활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민족·교양·정신 문화라는 심리적 저항선마저 무너뜨리는 국가 경제의 예외상태로서 IMF 관리 체제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IMF는 한국정부에게 자본이 요구하는 개혁을 수행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은 기업인, 공무원, 노동자 등 거의 전 영역의 사람들이 고통을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혹은 문화인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김대중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문화쇄국주의의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국가에 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봉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문화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차피 개방해야 할 것이라면 IMF 관리 체제에서 개방하는 것이 유리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은 8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한·일 공동선언’에 서명한다. 이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행한 모두발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일정기간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음을 공식화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 합의”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을 공식화한다. 이에 대해 오부치 일본 총리는 “대통령의 대일 문화개방 방침의 결정은 커다란 전진”이라고 화답했다.³²

같은 날 일본 국회에서 행해진 연설에서도 김대중은 일본 대중문화 개

32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21~25쪽.

방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이 “우리의 단기외채 연장에 있어서 그 3분의 1이 넘는 79억 달러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시켜” 준 데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아시아 경제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한다.³³ 이러한 김대중의 말을 보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는 외환 위기 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일종의 보답 같은 성격도 감지된다.

그런데 일본 NHK와의 인터뷰 중의 다음 대목은 김대중에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질문: 문화교류는 정신적인 부분도 있으나, 동시에 문화산업을 지킨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문화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문화 개방과 관련, 문화산업의 보호·육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중: 과거에는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개방을 반대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이상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야지, 막아놓고 혼자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민족주의 시대, 민족경제의 시대, 자기 국경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1등을 해야 하는데, 막아서 해 보았자, 국내에서 1등을 해 보았자 세계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발전하고, 이기기 위해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 것, 유럽 것도 받아들이는데 왜 일본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일 간의 문화교역에서 한국의 수입초과만 계속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에 좀 더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3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40~43쪽.

김대중: 국교정상화 이후 33년이 되도록 국가의 상징이 되는 분이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월드컵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³⁴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음을 걱정하는 NHK의 질문³⁵에 대해, 위에서 보듯이 김대중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다. 이러한 양자의 대화 양상은 문화 교류에 있어 양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HK는 먼저 한국에서 그동안 일본 대중문화 반대의 명분으로 삼았던 자국의 문화산업을 지킨다는 측면에 대해 일종의 이해를 보인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1980년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미국의 스포츠나 드라마를 수입 방송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것도 공영 방송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 드라마를 비롯해 스모나, 요세, 가부키 등의 문화전통(산업)을 지켜 나가는 데 큰 힘을 기울여 왔다. 거기에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 자체도 미국 중심으로 균질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사실 1980~1990년대의 일본 대중문화는 세계화가 미국 중심의 문화로 균질화되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획득했음을 이해한다면, 미국에 이어 일본 대중문화의 타자로서 한국 대중문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호와 육성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NHK로 대표되는 일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맞서 지켜야 할 문화로서 ‘민

3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56쪽.

35 전집에 따르면 질문자는 나카히라 노보루(中平立) 전 일·북한 수교교섭 대표, 기시 도시로(岸俊郎) 서울지국장, 그리고 구니야 히로코(国谷裕子) 아나운서라고 한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51쪽.

족'이나 '전통'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경제 시대에 “자기 국경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경제”로서 문화산업은 의미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는 그가 일본 대중문화를 한국의 문화산업, 즉 생산자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뿐 그 수용자인 한국 소비자들의 관점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에게 일본 대중문화는, 마치 전자산업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참조하고, 분석하고, 경쟁하고,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요청될 뿐,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한국인이 일본 대중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거나, 고단한 삶을 잠시 잊게 해 주는 새로운 오락거리로 향유할 가능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방일 기간 중 김대중의 연설문 등을 살펴보면 전후 일본 대중문화가 자신들에게 일본의 문화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개인으로서 김대중이 한국 담론 공간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언급되는 ‘폭력성’과 ‘선전성’, 혹은 찬성 의견으로 언급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자적 미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다.³⁶ 또한 일본 대중문화가 전전의 군국주의적 문화와는 달리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실현과 깊은 관련이 있음도,³⁷ 『이경규에서 스피이버그까지』를 통해 대중문화와 한국의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김대중이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³⁸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 김대중은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내용적 언급은 일체 회피한 채, 그 개방의 의미를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설명할 뿐이다.

이러한 김대중의 말에 대해 NHK는 문화교역에서도 일본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냐며 반문한다.³⁹ 1980년대 이래로 경제 영역에 있어 미국과의 무

36 김대중, 『이경규에서 스피이버그까지』, 조선일보사, 1997, 79~80쪽.

37 鶴見俊輔, 『戦後日本の大衆文化史』, 岩波書店, 2001, 99~100쪽.

38 김대중, 19~38쪽.

39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56~57쪽.

역 불균형 문제로 큰 곤혹을 치렀던 일본인들에게는, 문화교역에서도 불균형이 생기고, 그에 대한 불만이 반일 감정의 격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 질문은 김대중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이상 일본정부도 일본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답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대중은 통역상의 문제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영똥하게도 친황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1998년 시점에서 일본의 경우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21세기에 걸맞는 수평적인 한일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보고자 했다면, 한국의 경우 그것을 한일의 문화 교류보다는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봤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일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단순히 문화를 둘러싼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 차이로 설명할 수는 없다.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있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차이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문화에 대한 재인식의 차이 속에서 해명되는 편이 나올 것이다.

비록 버블은 붕괴되었다고는 해도 G7 회원국이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면서도 ‘새로운 아시아주의’⁴⁰를 추구했던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이른바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주변국에게 심어 주기 위해 중요했다면,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무한경쟁’으로서 세계화를 경험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문화역시 교류보다는 자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즉 자국의 문화를 수용/소비하는 주체를 중시한 일본과는 달리, 한

40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창비, 2009, 105~160쪽.

국은 문화의 생산적 가치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은 일본 방문 중 일본 문화계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임을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는 한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해, 오부치 총리에게 한·일 양국 문화인을 중심으로 문화교류협의회 만들기를 제안했다고 설명한다.⁴¹

실제로 대통령 김대중의 말 속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실질적 수용자인 한국의 ‘대중’이라는 주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 방문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행한 문화의 날 기념식 연설 「21세기 세계일류 문화국가로 향해서」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입국을 향한 우리 모두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한 이 연설에서 그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 정책을 천명한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다음과 같이 언급될 뿐이다.

이번 저의 일본 방문을 통해 천명한 일본과의 문화교류도 이러한 자신감에서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일본과의 문화교류는 우리 문화에 새로운 자극을 주게 될 것이며,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받아들인 서구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문화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⁴²

위에서 보다시피 김대중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일본과의 문화교류”라고 하면서, 대중이라는 말을 아예 생략한다. 물론 이는 일본 대중문화는 일본문화에 속하고 이 연설이 대중을 향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연설에서 김대중은 문화예술인을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21세기

41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88~90쪽.

42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115~116쪽.

는 문화의 세기이다. 문화경쟁의 장에서 이긴 자가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그 문화경쟁에서 승자를 판단하는 한국의 대중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⁴³ 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정책이 역설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대중의 존재를 후경화하는 채로 진행되었음을 역력히 보여 준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공식화했음에도 이를 소비하게 될 한국 대중에 대한 언급의 회피는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 교류상의 불균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비판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어 속에서 보이는 이러한 회피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일본 총리의 언어 양상과는 대조적으로, 이후 양국 정치인들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 한일 문화 교류의 특징을 이루게 된다.

4. 김대중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지연의 의미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영화, 방송, 만화, 음악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장 점유율은 미비했던 반면, 일본에서 영화 <쉬리>가 크게 성공하면서 <겨울연가>의 히트로 표면화될 ‘한류’ 붐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⁴⁴ 따라서 오늘날에는 김대중의 예견대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다.

이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당시로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본과의 문화 교류가 겨우 정상화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2년 뒤인 2000년 9월 22일 김대중은 일본 방문 중 한·일 문화인과의

4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115쪽.

44 한영균,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현황 및 의의」, 『일본문화연구』 제86집, 2023, 276~279쪽; 남상욱, 「일본 대중문화와 한국의 통치성: 자기 제한 장치에서 플랫폼 속의 소비재로, 나아가 규제 회피의 회랑으로」, 『상허학보』 제54집, 2018, 139~141쪽.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오랜 문화교류의 역사를 지닌 우리 양국이 최근 반세기 동안 담을 쌓고 문화교류를 외면했던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10월 저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협력의 신시대가 열리면서 문화의 교류도 급류를 타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긴자 거리의 최신 유행이 불과 며칠 안에 서울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시장의 패션이 매일같이 일본으로 직수입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쉬리>가 일본에서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인기 남성 듀엣인 '차게와 아스카'는 서울공연에서 수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한·일 양국의 문화가 가까워질수록 한·일 양 국민 간의 교류와 친선은 더욱 확대되고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의 확대야말로 국가내에서의 저비용과 고효율의 공동체 운영을 촉진시킬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상호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⁴⁵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외면하다시피 했지만,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부터는 한일 양국의 문화는 패션,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교류되고 공유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가 언급하는 것은 2000년 8월 26,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내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차게&아스카> 공연인데, 이것은 실제로 2,000명 이상의 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공연을 허가하는 일본 대중문화 3차 개방 조치로 처음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연 첫날 공연장에는 관람객 6,000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 절반인 3,000여 명이 일본인이었다고 한다. 더

4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5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187쪽.

불어 이 기사는 이번 공연이 “일본 가수의 한국 무대 첫 본격 진출이란 의미를 인식해 대규모 팬들이 현해탄을 건너와 ‘바람을 잡았다’”는 점, 국내 지명도가 낮은 일본 록그룹 공연에 한국 대기업들이 협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그 수용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한국에서도 마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열광’적인 붐이 일어난 듯이 말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문화가 더욱 가까워지고, 국민 간의 교류와 친선이 확대와 신뢰가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1998년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방을 실시해 이제 남은 것은 방송 분야인데, 이 또한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대중의 말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교류를 통한 한일 양국의 상호신뢰 확대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상호안전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사실 2000년에는 한반도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6월 15일 김대중은 대통령으로서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김대중의 문화 인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제로 그는 이 간담회에서도 상당 부분을 6·15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할애한 후, 북한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의미를 “상호이해와 신뢰 속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차 안전한 통일에의 길을 열게 되”는 데에서 찾는다. 즉, 경제 위기 속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철저히 경제성 위주로만 파악되어야 했던 문화는, 북한을 대상으로 “상호이해와 신뢰”를 획득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매개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대

46 허협, 「[대중음악] 디록그룹 ‘차게&아스카’ 잠실공연」, 『동아일보』, 2000년 8월 27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23327?sid=103>)(최종 검색일: 2023. 10. 1.).

중에게 “이제 상당히 진전된 한·일 간의 문화교류”는 “남북한과 일본 간의 3각 문화교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긴장 완화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변화는 일본에서도 있었다. 같은 해 4월 5일에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한·일 공동선언’에 서명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 뒤를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라고 인식한 모리 요시로(森喜朗)가 취임하게 되면서, 우경화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되었다. 실제로 2000년 4월 전후 일본사를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결성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자신들이 작성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와 『새로운 공민 교과서』에 대한 문부성 검정을 신청했다. 이 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이의제기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2001년 4월 일부만 수정된 채로 검정 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2001년 7월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역사교과서 문제의 분리불가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영화의 전면 개방과 위성 및 케이블 TV 애니메이션 개방이 포함된 4차 개방 검토 중단을 공식화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2001년 4월 총리가 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2001년 8월 13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고, 이러한 사실이 한국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가 급속도로 악화된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에만 세 번 만났고, 2002년 3월 22일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열린 한·일 공동 기자 회견에서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 중단 조치를 풀 계획이 있는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문화는 원칙적으로 개방돼야 하고 문화쇄국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개방이 늦춰졌고 또 지금까지는 점

진적으로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20일 고이즈미 수상과 7개 항에 합의하고 그것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병행해서 문화의 개방에 대해서는 필요한 과감한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자를 서로 병행하면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⁴⁷

여기서 2001년 10월 20일 고이즈미와 합의했다고 하는 7개 항이란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콩치조업 문제, 한일 항공협력, 일본입국사증면제, 돼지고기수출, 투자협정인데,⁴⁸ 그중에서 특히 역사교과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가 대중문화 개방을 늦추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다.⁴⁹ 문화쇄국주의에 대해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협력을 바라는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가능한 임기 내에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 개방을 위해 일본이 지켜 줘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기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오부치 총리의 사망 이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 개방의 지연은 일본의 우경화가 직접적인 원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 이면에는 홍성태가 지적했듯이 “문화는 규제되는 것이다. 규제의 주체는 국가권력이다.”라는 국가주의적 규제라는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⁵⁰ 홍성태에 따르면 문화에 대한 규제는 국가권력의 작동방식을 보여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

4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8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51쪽.

48 부형권, 「[한-일 개별정상회담] 고이즈미 “비자면제 실현 노력”」, 『동아일보』, 2001년 10월 21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11021/7750472/1>) (검색일: 2023. 10. 1.).

49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7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322쪽.

50 홍성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문화정치」, 『문학과학』 제41집, 2005, 143쪽.

과 규제 모두 국가가 문화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역사적 변동을 시야에 넣는 푸코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 지연이라는 방식의 규제로부터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통치 방법의 또 다른 측면을 읽어 낼 수도 있다.

앞서 우리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국인에게 경제적 인간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는데, 역사 문제를 근거로 이루어진 대중문화 개방의 지연은 한국인에게 스스로가 '역사'적 인간임을 잊지 말 것, 즉 경제적 인간만이 아님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일견 민족주의로의 후퇴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21세기 초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동시에, 경제적 타협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진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발 소비문화를 통해 지역과 생활이 균질화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된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지연도 문화를 둘러싼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벌어진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맞춰 한편으로는 사람과 물건,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을 수 없는 내셔널 히스토리나 전통이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문화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둘 어디에도 속할 수 있고 양자를 포괄할 수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자신의 통치 이념에 맞춰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후기에는 완전 개방의 지연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서 '문화'의 유용성을 재인식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 속에서 오직 시장만이 전부였던 김대중 정부가 다시 시장 '바깥'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재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징벌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비단 김대중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9·11 이후 미국은 테러 지원국을 글로벌 시장 바깥으로 몰아냈다. 글로벌 시장으로부터의 추

방 혹은 제재는 시장 개방과 하나의 쌍을 이루는 21세기 교류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한다.

물론 근대 이후 국가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장 바깥에 둬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해왔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시장 바깥이 있으며 그곳에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환기시키고 만다. 일본 대중문화는 시장 바깥에 꽤 오래 체류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한국의 국가 이성에 위협적인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의 완전한 시장 진입 지연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반문화’로서 그 존재 의미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지연된 일본 방송국이 제작한 드라마와 버라이어티 쇼는 상품이 아니라 ‘불법 복제품’이란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었고, 그렇게 일본 대중문화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금수품으로서 생명력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5. 나가며

퇴임을 앞둔 2003년 1월 24일 외신기자들과 오찬을 했을 때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대중은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는 우호친선관계로 하는 것”이라 전제한 후, 그 노력의 성과로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월드컵,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대중문화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질 것인데, 임기 내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⁵¹ 관련해서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게임과 음반의 전면 개방을 포함한 2004년 제4차 개

51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8권』, 387쪽.

방, 비디오 전면 개방과 드라마, 뮤직비디오 지상파 방영 외 전면 개방을 포함한 2006년 추가 개방을 통해서 거의 이루어졌다. 물론 일본인 중에서는 여전히 한국 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⁵²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가 일반화된 오늘날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대중문화는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에게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문화예술인조차도 예외 없이 시장 속에서 다른 문화와 경쟁하는 인간으로 살아야 함을 요청하는 메시지로서 표상되었다. 문화를 무한경쟁하는 산업의 일부로 보는 이러한 김대중의 말을 통해 문화 개념이 국가 통치의 필요성에 의해 전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표상하는 김대중의 말은 수용자 중심의 문화교류를 통해 대칭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기대와는 어긋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던 한국이 일본과 대칭적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가 진정된 이후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 개방을 지연하게 되었는데, 이는 21세기에 도 여전히 국가가 자신의 통치성 유지를 위해 어떠한 문화를 시장의 바깥에 둘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에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그 지연을 포함해서 기미야 다다시가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로만 볼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는 국가와 문화가 비대칭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부의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원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적 차원의 교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역할을

52 문정인·양기호 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한일관계: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의 함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120쪽.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중문화 개방 이전에 이미 있었고, 현재 뉴미디어 등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대중 교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투고일자: 2023. 12. 10. | 심사완료일자: 2023. 12. 20. | 게재확정일자: 2024. 1. 8.

1964.

松尾尊允, 「姜徳相, 琴乘洞『現代史資料6 関東大震災と朝鮮人』1963年への書評」, 『みすず』 6巻2号(通卷57号), みすず書房, 1964.

山田昭次,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虐殺事件とこれをめぐる現在の思想現況」, 『(季刊)戦争責任研究』 90号,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018.

<인터넷 자료>

沖繩テレビ, 「映画「福田村事件」 関東大震災後の虐殺事件を描く」, 2023. 9. 28., <https://www.youtube.com/watch?v=uX0LUQDatCE>(최종 검색일: 2023. 12. 26.).

神奈川県公文書館, 「執筆分担一覧」, <https://archives.pref.kanagawa.jp/>(최종 검색일: 2023. 12. 2.).

高麗博物館, 「関東大震災100年: 隠蔽された朝鮮人虐殺」, <https://kouraihakubutsukan.org/>(최종 검색일: 2023. 12. 5.).

東京都総務局総合防災部防災管理課, 「関東大震災100年」, <https://www.bousai.metro.tokyo.lg.jp/>(최종 검색일: 2023. 12. 5.).

東京大学大学院 総合文化研究科 グローバル地域研究機構 韓国学研究中心, 「関東大震災の朝鮮人虐殺から100年 レイシズムと歴史否定を考える ~国連特別報告者を迎えて」, <http://www.cks.c.u-tokyo.ac.jp/index.html>(최종 검색일: 2023. 12. 5.), <https://m.youtube.com/watch?v=1B-dwxw8Ugm8>(최종 검색일: 2012. 12. 5.).

<영문 문헌>

Ryang, Sonia, "The Great Kanto Earthquake and the Massacre of Koreans in 1923: Notes on Japan's Modern National Sovereignty," *Anthropological Quarterly* 76(4),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stitute for Ethnographic Research, 2003.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 남상욱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1권』, 인물과사상사, 2006.

김대중, 『이경규에서 스피버그까지』, 조선일보사, 1997.

김성민,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2014.

김학재,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집 2호, 2017.

남상욱, 「일본 대중문화와 한국의 통치성: 자기 제한 장치에서 플랫폼 속의 소비체로, 나아가 규제 회피의 회장으로」, 『상허학보』 제54집, 2018.

남은영, 「1990년대 한국 소비 문화: 소비의식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76집, 2007.

노명환, 「한류를 위한 김대중의 기여와 미완의 기대중 사상 정책의 완성을 위한 한류의 의미와 역할: 민주주의의 평화 상생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세계시민주의를 위하여」, 『역사문화연구』 제83집, 2022.

류동민, 「김대중의 경제사상에 관한 검토: 경제적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호, 2010.

류상영·와다 하루키·이토 나리히코 편, 『김대중과 한일관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한일현대사』, 연세

- 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2.
- 문정인·양기호 편,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한일관계: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파트너십 선언의 함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 보드리야르, 장,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15.
- 부형권, 「[한-일 개별정상회담] 고이즈미 “비자면제 실현 노력”」, 『동아일보』, 2001년 10월 21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11021/7750472/1>)(검색일: 2023. 10. 1.).
- 송주명, 『탈냉전기 일본의 국가전략: 안보내셔널리즘과 새로운 아시아주의』, 창비, 2009.
- 오현석, 「문화제국주의론에서 바라본 타자로서의 일본: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개방과 관련된 담론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8집, 2019.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1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2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5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7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 제8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6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7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19권』,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장인성,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자기 해방”: 일본 대중문화 담론의 성격과 개방의 방향」, 『국제문제연구』 22권1호, 1998.
- 푸코, 미셸, 오트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 난장, 2012.
- 한겨레신문, 「일 대중문화 단계적 개방: 정부 방침 일본배우 국산영화 출연등 우선 허용」, 1994년 2월 25일, 1면.
- 한영균,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의 현황 및 의의」, 『일본문화연구』 제86집, 2023.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컬렉션 일정일지기록 김영삼」, <https://www.pa.go.kr/portal/contents/stroll/schedule/scheduleIndex.do?year=1995&month=11&searchDate=1995-11-09>(최종 검색일: 2023. 10. 1.).
- 허협, 「[대중음악] 디스크그룹 ‘차게&아스카’ 잠실공연」, 『동아일보』, 2000년 8월 27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23327?sid=103>(최종 검색일: 2023. 10. 1.).
- 홍성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문화정치」, 『문학과학』 제41집, 2005.
- 히스, 조지프·앤드류 포터, 윤미경 옮김, 『혁명을 팝니다』, 마티, 2006.
- 木宮正史, 『日韓關係』, 岩波書店, 2021.
- 鶴見俊輔, 『戦後日本の大衆文化史』, 岩波書店, 2001.
- 「日韓共同宣言から25年, 外交にどう影響? 小此木名譽教授に聞く」, 『朝日新聞』 디지털, 2023. 10. 7.,
<https://www.asahi.com/articles/ASRB673B5RB4UHBI01D.html>(최종 검색일: 2023. 11. 30.).

한일 수소차(FCEV)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이유현·김민정·박성빈
권기현, 『정책분석론』, 박영사, 2010.

연구논단

관동대지진 학살문제의 인식론: '불편한 공존'의 균열과 '두 가지 국제화'의 행방 | 이경미

2023년은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부흥'과 '방재'의 스토리에 밀려 '은폐의 역사'가 답습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학살'이 절대적 관심사로 회자된다. 이 '이야기하는/하지 않는' 사이의 간격은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학살연구가 시작된 지도 벌써 6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일본에서 축적된 성과들이 한국 학계에도 소개되어 새로운 주제들의 발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해진 연구 주제들 만큼 '학살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학살문제의 '인식론'을 문제 삼기로 했다. 특히 주제의 다양화로 다소 혼잡해진 학살연구의 현주소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의 주요 쟁점(유언의 발생 근원, 피살자의 성격)을 '역사적 맥락'에 주의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 글의 시도는 연구사를 논쟁사적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접근이 현실의 문제에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관동대지진, 학살, 유언, 한일회담, 강덕상

김대중의 말을 통해 본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의미 | 남상욱

이 글은 국가의 통치성을 재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에서 일본 대중문화와 그 개방과 지연은 어떻게 표상되었는지를,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문화'가 어떻게 국가 통치성의 영역에 재배치되고, 기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의 말 속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문화예술인도 예외 없이 시장 속 인간으로 살아야 함을 요청하는 메시지로 시 기능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자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표상하는 김대중의 말은 수용자 중심의 문화교류를 통해 대칭적 관계를 맺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기대와는 어긋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던 한국이 일본과 대칭적 관계를 맺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한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한 개방을 지연하게 되었는데, 이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국가가 자신의 통치성 유지를 위해 어떠한 문화를 시장의 바깥에 둘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원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적 차원의 교류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역할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 통치성, 신자유주의, 문화 교류, 한일관계

한일 수소차(FCEV) 정책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정책전문가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 이유현·김민정·박성빈

기후변화에 기인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은 교통, 에너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였다. 수소차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환경적 측면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구매력 상승 등의 산업적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소차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실제 수소차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중

ARTICLES

Epistemological Question of the Massacre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e Cleavage of 'Uncomfortable Coexistence' and the Whereabouts of 'Two Internationalizations' | LEE Kyung-mi

The year 2023 marks the centenary of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However, in Japan, the 'history of concealment' is still dominated by narratives of 'reconstr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assacre' is repeatedly talked about as an absolute concern. The gap between 'what is said' and 'what is not said' is increasingly widening. It has been 60 years since massacre studies began, and its accumulated achievements in Japan have been introduced to Korean academia, leading to the discovery of new topics. Nevertheless, its prospect is not so bright because the 'viewpoint on the massacre' has failed to be renewed unlike greater diversification in research topics. In this sense, this paper addresses the 'epistemology' of the massacre problem.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s (the source of the rumor, the character of the victim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ontext,'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massacre studies. This attempt is not only significant in its survey of existing research from a perspective of contested history, but also in its display of potential implications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can have on actual real-world problems.

• **Keywords:** Kanto Earthquake, Massacre, Rumor, Korea-Japan Talks, Kang Deok-sang

The Significance of Kim Dae-jung's Open-Door Policy towards Japanese Pop Culture | NAM Sang-wook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popular culture and Korea's related stances of opening and delay were represented in the discourse of President Kim Dae-jung which represents the governmentality of the state. This is to understand how 'culture' has been rearranged and functioned in Korea since the 1990s within the realm of national governmentality and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Above all, in the discourse of Kim Dae-jung who became president in the midst of the IMF economic crisi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ular culture served as a message asking cultural artists to live as human beings in the market without exception under the global market economy system. His discourse, which represent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ular cultu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own cultural industry, contradicted the Japanese expectations for a symmetrical relationship through recipient-centered cultural exchanges, but eventually, this contributed to the 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Kim Dae-jung government delayed the full opening of Japanese pop culture due to textbook issues, indicating that, even in the 21st century, the state still has the power to place certain culture outside its market to maintain its governmentality.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critically consider the Kim administration's intention

to regard the lifting of the ban on popular 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desirable starting point for Korea-Japan relations, because it implicitly presupposes the official role of the state in exchanges at the public level.

• **Keywords:** Korea's Opening to Japanese Pop Culture, Kim Dae-jung, Governmentality, Neoliberalism, Cultural Exchange, Korea-Japan Relations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olicy Goals of the FCEV Industry: Comparing Perceptions of Policy Experts in South Korea and Japan

| LEE Youhyun · KIM Min-Jeong · PAK Seong Bin

In order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transition toward hydrogen econom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both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industrial sectors. The FCEV industry is important for both the environmental aspec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industrial aspect of growing the eco-friendly vehicle market and increasing purchasing pow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FCEV industry in both Korea and Japan, and provid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nd suggest some evidence-based policy goals. In this study, 18 Korean policy experts and 18 Japanese policy experts (36 policy experts in total) were surveyed in person and via email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and Japanese policy experts perceive the level of policy development to be relatively equivalent to that of the compared countries in terms of technology, but perceive it to be insufficient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Based on the experts' perceptions, the key challenges to the policy goals of the FCEV industry were largely consist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but differed in technical areas. That is, in terms of technology, Korean experts emphasized infrastructure technology, while the Japanese considered safety technology much more important, and only the Japanese prioritized securing hydrog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CCUS technology. Korean experts, on the other hand, focused on overall R&D support. As for institutional challenges, both countries prioritized financial support, regulatory reform, tax reform, legal framework, and R&D support. While existing S&T and industrial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s focused more on technical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hydrogen industry, there is greater potential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order to achieve hydrogen economy for both Kore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promote joint research and mutual policy cooperation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instruments to regulate, finance, and support R&D, research on related tax systems, and improved hydrogen laws.

• **Keywords:** Fuel Cell Electric Vehicle, Korea-Japan Cooperation, Policy Goal, Policy Task, Hydrogen Economy, Expert's Perception